

충청남도 도시의 변화 및 과제

건양대학교

임 양 빈

제1장. 서론

- 국토 및 지역은 지역민들의 행적이 담긴 역사이며 현 세대가 활동하는 무대이자 삶의 현장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임. 그러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지역을 바람직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임. 즉 적절한 예측을 통한 적합한 대응은 향후 21세기에 전개될 지역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바람직한 의무임.
- 이를 위해 현 국토 및 충남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에 발생할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계획의 기초와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내용은 ‘국토 및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국토 및 지역의 미래상 전망’ 그리고 ‘충청남도 도시의 변화와 과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뉨.
- ‘국토 및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부문에서는 현재 우리 국토가 가진 문제점 중 중요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점, 환경 및 교통 . 인프라에 관련한 문제점, 국토 공간 활용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함.
- ‘국토 및 지역의 미래상 전망’에서는 ① 인구 ② 환경 및 교통 ③ 국토 및 도시, 총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미래 국토 및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성과 발생 가능 시기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와 그에 따른 국토 및 지역계획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함.
- ‘충청남도 도시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향후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역 미래상에 대하여 검토하고 민선 5기 공약 가운데 건설교통 부문을 토대로 도시의 발전 과제 및 방안을 논의함.
- 본 원고는 지역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지역 개발 및 도시에 관한 토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장. 국토 및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1. 문제점 진단

1) 인구

□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2007년 전국인구의 48.9% (약 24,472천 명)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역 간 인구분포의 편중 정도는 심화됨 (인구분포의 공간적 편중 정도를 Gini 계수로 측정하였을 때 1984년 0.44에서 2005년 0.55로 상승).
- 수도권의 과밀화는 삶의 질과 경쟁력 저하를 유발(2008년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주요도시 215개 중 86위)하고 있음.
- 지방 대부분의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발전 잠재력 저하와 농촌 사회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인구 3만 명 미만 군 지역의 수가 1995년 9개에서 2005년 18개로 증가)에 이름.

□ 출산율 저하와 인구증가율의 감소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 총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09).
-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노동력의 주축인 30-40 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그동안 교육, 주택,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이내에 시작될 전망이며, 총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군입대자원의 감소도 예상됨.

□ 1인 및 노인가구의 증가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증가함.

<표 2-1>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수 변화전망

	2000년	2008년	2018년	2030년
총 인구(만 명)	4,701	4,861	4,934	4,863
총 가구(만 가구)	1,451	1,667	1,871	1,987
가구원 수 (명)	3.1	2.8	2.5	2.4
1인 가구(만 가구)	226	336	398	471
부부가구(만 가구)	179	246	319	411

자료: 통계청 (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8년 노인인구 500만 명을 돌파(전체 인구의 10%)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빈곤화의 지역 격차 심화: 64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서울과 광역시가 낮은 반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촌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농촌의 황폐화와 노인 빈곤화가 지방의 농산어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문화 가정의 증가

- 농촌총각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함. 이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함. 2007년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자 7,930명 중 40%가 외국여자와 결혼, 3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경제연구원, 2008).
-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는 언어와 문화 습득, 2세육아 및 교육문제 등이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교통 및 환경

- 향후 환경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그 시기적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해결이 된다면 그 시기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국토·도시·교통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2020년경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 미흡(22.0%)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의 교통체계 부족(26.7%)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 또한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게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국토·도시·교통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국토계획 과제로 친환경 도시 개발인 녹색도시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교통구조 측면에서 대중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지원 제도 마련 및 인센티브 부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 부족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위해 기존의 개발 방식에 환경의 중요성을 담아내는 녹색 도시에 대한 모델 및 연구가 절실하며,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됨.

- 향후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과제에 대해 농지 확보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적정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는 보다 발전하여, 2020년경에 이르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나타남.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시스템/시설을 구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추가적으로 조기 경보 정보시스템/방재 시스템의 구축 역시 필요한 과제 인 것으로 분석됨.
- 여객 수송과 화물 수송의 교통수단에 따른 2020년 예상을 살펴보면, 비행기와 철도 및 지하철에 대해 급증·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음. 추가적으로 화물 수송의 경우, 해저터널, 해상교통 등 새로운 연결방법이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함.
- 향후 경제, 산업 및 세계화 측면에서 동북아를 연결하는 교통, 물류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살펴보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쟁력과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 교통 인프라에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의 인프라 간 연계성 부족 문제(34.7%), 국가 기간 교통망의 지역 간 공급불균형 문제(31.3%)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통, 물류 인프라에 대한 국토 계획적 과제에 대해 동북아(중국-북한-한국-일본)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등 육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해저터널과 같은 신 교통망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각 교통의 결절점에 대해 인적·물적 기지 창고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교통 측면에서 경쟁력과 더불어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체계 보다 종합적이고 초국경적인 육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기존 것과 새로운 연결망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시사됨.

3) 국토 및 도시계획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수단의 미흡

- 국토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의 효과적 보전과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임.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활발한 채 구체적 전략 제시와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토개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부재,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미흡, 환경성을 고려한 개발지침과 개발모형 제시 부족, 실천적 관리수단으로서의 지표 미개발 등이 문제임.

□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토대응체계 구축 미흡

- 높은 인구밀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단위 면적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대도시권 지역의 대기 및 수질 오염 가중,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높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임.
-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수단 취약: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감축해야 하나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장기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보전용도에서 개발용도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은 주택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 등 새로운 도시적 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함.
- 새로운 수요는 기존 도시의 재개발 또는 미개발 용지의 활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도시주변의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양호한 산지와 농지의 훼손이 지속될 전망이다.

□ 국토정책 관련 갈등의 심화

-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주요 국책사업 추진 시 체계화된 합의 형성 체계가 없어 국민의 합의 도출이 곤란한 점임.
- 그 원인은 국토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추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조정체계도 부족함.
- 계획적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이 증가하는 문제도 대두됨. 국토환경에 미치는 환경부하에 대해 스스로 수용,

정화, 복원할 수 있는 국토개발체계 구축이 요구되나 기존 국토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간개념이 배제되고 있음.

□ 하천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 부재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 평균 973mm의 1.3배에 이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평균 총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영국, 벨기에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
- 또한 연간 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되어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함.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유역의 보수능력이 적은 편임.
-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유량변동계수(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 정도로 외국의 10배 이상임.
- 또한 유역별 1인당 가용 수자원의 양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대수층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개발도 어려운 실정임.
- 현재의 하천관리는 하천의 제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부문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문별 관리로는 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수질 악화와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유역 내 생태계 보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 수계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개수사업이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의 경우 개수 미흡하여 하천개수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
- 하천환경적 측면에서도 하천을 지역별로 관리함으로써 수계를 일관하는 하천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제3장. 도시 및 지역 미래상 전망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목표

1) 2020년 미래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설문조사(2009)를 통해 파악된 우리 국토의 미래상은 ‘건강하고 쾌적하며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토’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녹색국토’임. 다음으로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 가능한 국토’,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개방형 국토’의 순위로 제시됨.

<표 3-1> 향후 20년간 지향해야 할 우리 국토의 미래상

순위	응답항목	응답결과 (1,2,3순위 합계)
1	건강하고 쾌적하며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토	116
2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 가능한 선진녹색 국토	96
3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 가능한 국토	77
4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선진개방형 국토	73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토	61
6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국토	39
7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국토	32

자료: 국토연구원 (2009) 국토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위 조사결과의 특징은 다수의 응답자가 ‘삶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국토가 지향해야 할 국토미래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이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토미래상인 ‘골고루 잘 사는 균형국토(2004)’와 ‘수도권과 지방이 잘 사는 균형국토(2008)’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 실현이 보다 중요해졌음을 시사함.
- 도시미래상 캐치프레이즈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996년도 설문조사에서는 균형개발(41%), 환경국가(27%), 쾌적한 전원도시화(22%)가 제시되었으나, 1999년도 설문조사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43%), 높은 삶의 질(18%), 균형발전(15%)으로 나타남. 이는 전문가들의 국토미래상에 대한 인식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부여가 점차 높아졌음을 의미함.

- 그러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04년과 2008년도 설문조사에서는 2020년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토미래상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46.3%)’, ‘친환경적 녹색국토(34.6%)’, ‘경쟁력 있는 생산국토(12.3%)’, ‘국제화된 개방국토(6.1%)’의 순서로 선정됨.
- 이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들 간에 도시의 미래상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도시미래상에 관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아졌고, 균형개발보다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상이 제시됨.
- 이러한 결과는 도시정책의 방향이 국토균형개발을 지향하되, 향후 20년간 국토정책은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즉 국토정책에서 ‘국토균형개발’과 같은 국가적인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과 같이 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짐.

2) 국토계획의 기초와 목표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바람직한 국토미래상을 정립하고자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발의 목표와 전략이 제시됨.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는 (1)국토이용의 효율화, (2)개발기반의 확충, (3)국토자원 개발과 자연의 보호 보전, (4)국민생활환경 개선이었음. 이러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거점개발과 권역구분(4대권, 8중권, 17소권)에 의한 국토이용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통신망의 정비 및 확충과 국토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된 성과임.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는 (1)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2)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3)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4)국토자연환경 보전이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토 공간구조의 다핵구조화 및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과 부산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사회간접자본 확충,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을 활용함.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는 (1)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2)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3)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4)남북통일 대비 국토기반 조성이었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1)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2)신산업지대 조성 and 산업구조의 고도화, (3)통합적 고속교통망 구축, (4)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5)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관련 제도 정비, (6)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를 채택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를 기본목표로 제시함. 계획의 주요 내용은 (1)개방형 통합국토 축 형성, (2)지역별 경쟁력 강화, (3)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5)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6)집행수단의 강화였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계획의 기조로 삼고,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를 5대 목표로 설정함.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1)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2)동북아시아대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3)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5)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6)분권형 국토계획과 집행체계 구축이 포함됨.
-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을 비교한 결과 계획의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됨.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에는 저비용 고효율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기반 구축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촉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과 남북 간의 상생 실현을 담고 있음. 계획 목표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수정계획에 '살기 좋은 복지국토'가 추가된 점임.

<표 3-2>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기조 및 목표 비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계획의 기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계획 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코자 2009년도 설문조사에서 현 국토정책의 기초와 목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현재의 목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문항들 간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국토'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상생하는 균형국토'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초인 '약동하는 통합국토'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계획목표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현 국토계획의 기초와 목표에 관한 의견

순위	응답항목	유지	수정
1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150	11
2	살기 좋은 복지국토	148	11
3	상생하는 균형국토	143	19
4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138	21
5	번영하는 통일국토	119	26
6	기조: 약동하는 통합국토	124	38

자료: 국토연구원 (2009) 국토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최근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인 변화는 도시, 주거, 국토환경, 물, 해양, 교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제시를 필요로 함. 2009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효율성'이 다음 순위였음. '상생성'과 '균형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국토종합계획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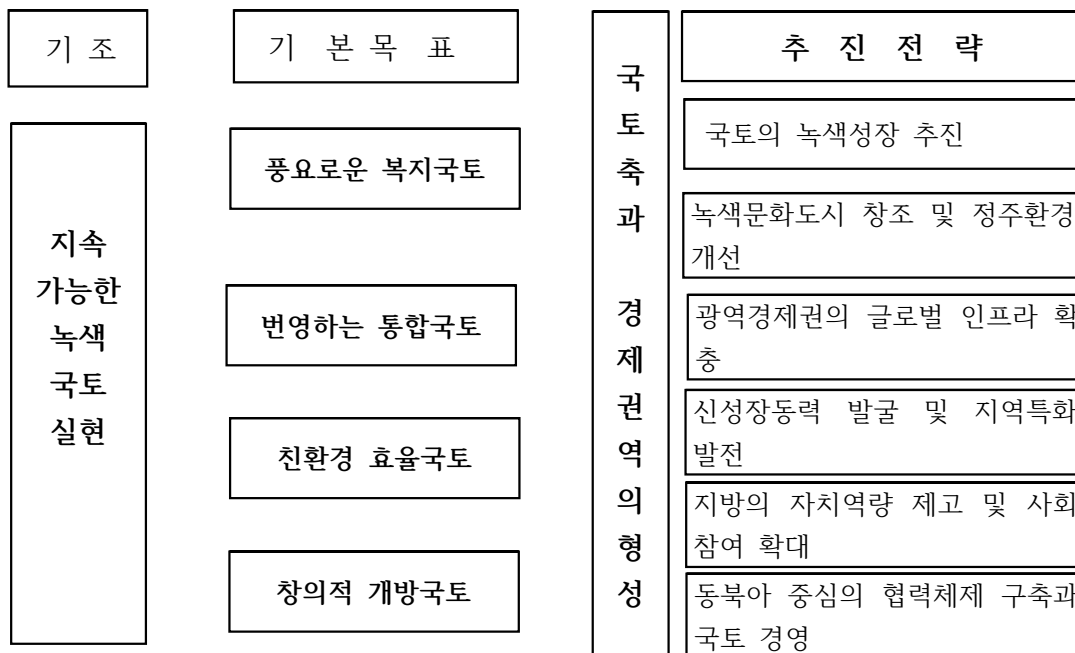
순위	응답항목	순위 합계
1	지속가능성	152
2	효율성	99
3	상생성	90
4	균형성	89
5	개방성	62

자료: 국토연구원 (2009) 국토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2009년 설문조사에서 2020년 예상되는 국토 및 공간구조의 문제점으로 우선순위는 '인구 및 산업의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발전잠재력 편차', '도시화 지속으로 인한 도시집중 및 농촌공간 황폐화', '소득 불균형에 의한 정주환경이 이질화'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동일한 설문에서 향후 20년간 국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국토정책의 미래상에 관한 질문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토',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 가능한 선진녹색국토'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 불균형 발전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향후 환경과 삶의 질의 중요성이 국토의 미래상에 반영할 것을 제시
- 2009년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토계획이 기초 및 목표 그리고 국토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고려할 때 2020년 우리 국토가 실현해야 할 미래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국토'(안)를 선정



<그림 3-1>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의 기본 틀(안)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실현'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높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또는 생태적 지속성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
 - 경제적 효율성은 다양한 고용기회와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이루되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하고, 사회적 형평성은 모든 차원의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미래세대의 발전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공간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감을 의미
 - 환경적 생태적 지속성은 환경이 인류에게 부여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의 가치를 환경의 질로서 평가함을 의미.
 - 설문조사 결과 '환경적 부담 최소화하는 국토이용', '상생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개발과 보전의 명확한 구분' 등이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됨.
 -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는 '균형성을 내세운 비효율적 계획 수립 방지', '다양한 계획기법의 적용' 등이 제시됨.

- 2009년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계획의 기초를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실현'으로 설정함. 우리 국토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인 국토종합계획이 방향성(지속가능성, 상생성, 효율성 순위), 기존 계획의 목표 중 유지하자는 의견을 고려, '풍요로운 복지국토', '번영하는 통합국토', '친환경 효율국토', '창의적 개방국토'를 목표(안)으로 설정함.

2. 발전전략

- 위에 제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의 기조와 목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도 델파이 1, 2차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녹색성장 추진
 - 신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저탄소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며, 자연과 문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함.
 -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함.
 - 녹색성장형 생태도시, 대중교통 연계형 압축도시, 친환경 에너지저감형 그린 건축 등 녹색도시를 개발함.
 - 한 기업의 불용자원을 다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추구함.
- 녹색 문화도시 창조 및 정주환경 개선
 - 노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1인 1가구의 특성별 주거유형을 고려한 주택공급, 1인 가구용 공공임재주택 공급, 1인 가구의 주택소유로 인한 과세부담 축소 등 관련정책을 시행 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 문화·예술, 환경 측면에서 삶의 질적 수준 제고 가능한 도시 공간을 창출함.
 - 도시 내에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한 생태회랑을 조성함.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거주자 증가에 대비한 사회·문화·복지시설 확충, 거주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함.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인프라 확충
 - 지역별 발전잠재력 편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단위로의 행정구역을 개편함.
 - 7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해서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함.
 -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광역권계획 수립 등 국토계획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 추진방안으로 광역권 협의회 구축, 행정구역 개편, 광역권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함.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및 광역프로젝트화 추진, 광역경제권의 산업, 기술, 인력, 인프라의 통합과 연계 및 역량을 강화함.

- 개방형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함.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산업 발굴 및 녹색 성장형 신성장거점을 육성함.
-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전략 추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함.
- 향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높은 토지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 부분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국가 차원의 국유지 확충, 개발 가용지 확대 및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함.
-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해양관련 산업 육성 기반 구축. 해양 및 연안 활용을 물류·레저·수산업 등 복합기능 중심으로 활용하거나, 레저·관광·휴양 기능 중심의 활용방안을 강구함.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 인구 및 산업 등 지역편차 해결을 위해 행.재정적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강화함.
-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화 기반 조성: 도농연계 전원마을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명품브랜드화함.
- 농촌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창출 기반, 복지 및 서비스 기반, 교육여건 등의 확보 및 개선 등 지방 자체의 생활수준을 향상함.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이양함.

□ 동북아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과 국토 경영

- 동북아 국가 간의 교통·통신망 연계 및 동북아 경제 중심의 주요기관 유치 및 교류 거점을 마련함.
- 국내 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특구조성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
- 국제적 수준의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의 장소성 및 정체성 확립, 각종규제완화,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북아 물류 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함.

□ 국토 및 지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 이밖에도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토미래상 구현을 위한 국토계획 추진전략으로는 (1)기존 도심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와 대도시권 국제 경쟁력 강화, (2)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3)다양한 녹색 신성장동력 개발, (4)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을 기본 공간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됨.

3. 미래 선진화된 지역 창출을 위한 계획과제 도출

- 이상에서 파악한 국토 및 지역의 분야별 문제점을 토대로 미래 선진화된 국토 창출을 위한 계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1) 인구

- “국토미래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보고서”(국토연구원, 2008.12)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5.4%는 향후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현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50.6%가 희망 거주 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함.
- “국토미래상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국토연구원, 2009)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가장 심각한 우리 국토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수도권 집중은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취약과 정주환경의 악화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취약으로 이어져 우리 국토의 대내외적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인식됨.
- 2009년의 설문조사에서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개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및 복지수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됨.

<표 3-5>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순위	응답항목	응답결과 (%)
1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35.7
2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취약	22.3
3	정주환경의 악화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취약	10.2
4	국토환경문제의 심화	8.9
5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과 경쟁력 취약	2.2

자료: 국토연구원 (2009) 국토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2) 환경 및 교통

- 델파이 조사를 통해 본 국토미래상 전망(1999)에서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하는 국민의식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응답자의 70%가 가능하다고 밝힘. 향후 필요한 토지자원은 ‘기존 토지의 고밀이용’(54%)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산지와 농지전용을 통한 토지공급’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가 가장 높게 선호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2004)에서도 ‘환경기준 연동제 도입’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91%)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개발과 환경보존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 보전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됨. 2020년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토미래상에 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4.6%가 ‘친환경적 녹색국토’를 선택함.
- 국토미래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2008)에서는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친 개발 및 환경오염’이 2순위로 선정됨. 환경훼손과 오염 최소화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식 전환(37.0%)’과 ‘개발계획 시 환경 고려(35.1%)’가 선정됨.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9)의 설문조사에서도 ‘국토환경문제 심화’가 우리 국토의 문제로 지적됨. 수도권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성장위주 개발’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 환경문제 중 심각한 문제는 ‘수량, 수질, 지하수 등 수자원 활용과 오염 문제’가 1순위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미흡 문제’가 2순위로 선정됨.

<표 3-6>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심각성 비교

순위	응답항목	응답결과 (%)
1	최소 주거기준 확보를 위한 지원	40.8
2	문화와 교육기회 확대	27.3
3	사회복지시설 확충	19.9
4	사회적 관심도 제고	10.1
5	기타	1.8

자료: 국토연구원 (2009) 국토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2009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앞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기는 2020년경일 것으로 전망함.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토, 도시, 교통구조로의 전환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2020년경에 실현될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각종 재해와 재난 대비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적 에너지 및 식량 부족문제 해결 가능성도 낮았고, 발생 시기도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국제항만, 공항, 육상교통 수단 간 운송체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물류운송의 경쟁력 저하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남.

3. 도시계획

- 국토 어디에서나 동일한 삶의 질의 실현과 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다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 국토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35.7%)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 상의 문제점으로 인구 및 산업의 편중으로 지역별 발전 잠재력의 편차(35.5%)가 큰 문제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및 산업 등의 지역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지방 분권의 실현이 선과제로 나타났으며,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경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분권의 확립, 정부 주도의 개편 등의 단계적·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함.
- 자립적인 지방분권화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선진적인 국토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18.0%)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우리 국토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이 취약함(22.3%)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높은 토지비용(33.6%)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높은 토지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국토 계획적 과제로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투자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방안 마련, 국공유지 위주의 개발 등이 적절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관리 측면에서 2020년 즈음에는 광역적 계획·개발·관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현 국토계획 중 7대(5+2) 광역권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55.2%)가 가장 중요하며, ‘광역기본계획 수립 등의 국토계획체제의 개편(31.5%)이 적합한 방안으로 나타남.

제4장. 충청남도 도시의 변화 및 과제

- 본 고에서는 충남지역과 관련한 건설 및 교통 부문은 민선5기 주요 공약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 구호로 내건 민선5기가 출범함.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의 공약, 3개의 역점과제가 제시됨.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도 건설교통 분야의 정책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첫째, 충남 항만 육성. 당진항을 중심으로 주요 항만을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항만과 산업단지 간의 기반시설을 구축함. 당진평택항의 위상과 도계 문제 등도 향후 해결과제임.
- 둘째, 항만물류 전담부서 설치. 도내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개발과 산업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담부서 설치의 직제개편 시 주요 현안과제임. 타 광역시도의 직제와 비교할 때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필요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항만국을 확대 설치함.
- 셋째, 3S(safe, slow, small)가치가 살아있는 도로 관리. 마을 및 학교 인접 지방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친화형 도로를 확보함. 차량 중심의 기반시설에 머물렀던 도로를 사람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는 새로운 가치가 담겨있음.
- 넷째, 도청이전 신도시 지속 추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례가 될 것임.
- 다섯째, 충청광역권 교통기반 구축 및 방사형 도로 정비. 도내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함께 급증하는 물동량 및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2경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충청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할 필요 있음.
- 여섯째,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충남 만들기. 도시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함.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음. 그밖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 주거안정 추진, 도로별 주 용도 발전체계 마련 등 3개의 역점과제가 있음.

<표 4-1> 충청남도 민선5기 건설교통 부문 주요 공약 및 추진현황

과제명	주무부서	사 업 개 요		
		정 책 목 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주민참여형 녹색도시 계획수립	건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녹색 도시계획수립방안 마련 - 도시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안마련을 위한 사례 및 자료 조사 - 주민, 전문가, 시·군 공무원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녹색도시 계획 수립 방안 마련
사람중심의 도로 (3S) 정비	도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 인간 중심의 녹색환경 길 만들기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행복한 길 만들기 	<p>총 679개소 2,210억원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 '04~'10년 151개소, 991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09~'10년, 6개소 211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03~'10년, 425개소 896억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01~'10년, 97개소 112억원 	<p>총 867개소 8,174억원 투자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 176개소, 1,485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536개소 6,283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8개소 82억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127개소 324억원
항만·물류기본 계획수립	항만물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잠재력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창출 - 항만종합발전 계획수립 ○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 항만물류 시스템구축 - 물동량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기본 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정책자문 - 용역과제, 용역 내용, 용역방향 ○ 용역발주 및 착수 보고회 개최 - 용역발주 4월, 착수보고회 5월 ※ 항만종합발전 계획 KMI, 물류기본계획 중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중간보고회와 연계 정책자문 - 정책자문을 통한 용역 내용의 내실화 도모 ○ 용역 최종내용 점검 - 용역최종보고회와 연계 정책자문내용 반영여부 확인 등

<표 4-1> 충청남도 민선5기 건설교통 부문 주요 공약 및 추진현황

과제명	주무부서	사 업 개 요		
		정 책 목 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토지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투기거래 방지 실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한 공시가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대이전 ('09.9.~'11.9)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등 4리 장항생태산업 단지 ('10.12~'11.12)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등 5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지역내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을 및 가격상승 등 지정지역의 사업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역 내 보상유무 해당 시·군 검토의견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자문회의 개최 ('11. 8)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활성화	치수방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발생시 총괄기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특보 발령 및 재해발생시 상주근무로 재난총괄 기능 제고 재난위기통합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방안 담당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때.곳 : 4.20, 재난상황실 참석 : 도 13개 분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 선정(5명) 자문회의 준비 : 6월

제5장. 맺음말

- 이상과 같이 제시된 건설교통 분야의 공약들을 민선5기에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에 불어 닥친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세종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최근 과학벨트 대전 입지에 따라 세종시 역할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전처럼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해외자본이 활발하게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유입됐지만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투자가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가 사라졌기 때문임.

- 충남도의 서해안경제권 시행과정에서 도내의 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감소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투자 현실은 외자유치 과정에서 충남도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대목임.
- 충남은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나 이제는 인구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가 되었음.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 기후변화 등은 우리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 크기와 실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 이런 미래과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태세를 하루빨리 정립해야 함.
- 그동안 건설교통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정책시행에서 진일보하여 지역민의 폭 넓은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기반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의 육성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이제 지역적 한계를 타타하기 위해 앞서 충남의 사회자본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 뛰어난 자연환경, 지속적인 외부 인구유입, 통합형 지역정서, 미래형 산업기반 등은 충남만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이며 이의 상호보완을 통해 향후 지역 발전의 기회요소로 삼는 노력이 필요.